

「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」 사업비 관리지침

2025. 12. 30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」(이하 “사업”)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의 집행하는 사업비의 구성, 집행 기준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본 지침은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하는 사업비에 적용한다.

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사업 운영요령」,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, 운영기관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.

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업비”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의 현금출자금 및 협력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말한다.
2. “운영기관”이란 산업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, 「친환경산업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말한다.
3. “협력기업”이란 주관기업과의 거래실적이 있는 공급망 내 기업으로서, 사업장 내 탄소감축 설비를 구축·운전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.
4. “협업기관”이란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컨설팅, 기술지원 등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5. “참여기관”이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, 기관을 말한다.
6. “재원관리기관”이란 정부지원금 및 주관기업의 현금출자금을 관리하고, 교부·정산·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7. “지정회계기관”이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, 협력기업과 협업기관의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8. “설비비”란 협력기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치하는 감축설비의 구매 비용을 말한다.
9. “설치공사비”란 감축설비의 설치·배관·전기·기초 등 필수 공사 비용을 말한다.

제2장 운영기관 사업비

제4조(사업비의 구성) 운영기관의 사업비는 산업통상부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의 ‘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’을 준용하여 산정·집행하며, 사업비의 계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간접비: 당해연도 운영기관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
2. 연구수당: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
3. 공통 운영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기관 내부 원규를 따른다.

제5조(사업비 변경) ①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변경은 총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비목 간 전용
 2. 인건비·연구수당·간접비 비율 변경
 3. 총괄기관이 승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다음 각 호의 변경은 총괄기관 승인 없이 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하되, 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1. 동일 비목 내 세부항목 간 조정
 2.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정산 차이 조정

제6조(회계정산) ①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계기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,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정산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괄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1. 집행 잔액
 2.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
 3. 회계기관이 불인정한 금액

제3장 협력기업 사업비

제7조(사업비의 구성) ① 협력기업의 사업비는 탄소감축 설비 구매 및 필수 설치 공사로 한정하며, 각 비목별 인정항목은 다음과 같다.

1. 설비비: 감축설비 구매비, 설비 설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장치 포함
2. 설치공사비: 설비 설치에 필수적인 전기·배관·덕트 등 연결공사, 바닥 보강·기초 확대 등 구조보강공사, 안전시설 설치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공사, 기타 설비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공사

※ 인허가비, 운영비, 인건비, 유지보수비, 부가가치세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협력기업의 회계정산 수수료는 정부지원금에서 계상할 수 없으며, 민간부담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비의 집행) ① 협력기업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 및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부가가치세는 전액 불인정한다.

③ 사업비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.

④ 협력기업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집행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비 변경) ① 협력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사업비 비목 간 변경
2. 총 사업비 증감

② 그 외 사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운영기관 승인 없이 통보로 갈음한다.

③ 협력기업은 승인 또는 통보된 변경내역을 정산 시 지정회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계정산) ① 협력기업은 정부지원금, 주관기업 현금출자금 및 협력기업 민간부담금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정회계기관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정산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집행 잔액

2.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
 3. 지정회계기관이 불인정한 금액
- ③ 지정회계기관은 정산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협력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장 협업기관 사업비

제11조(사업비 구성) ① 협업기관 사업비는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사업공고문에 명시한 업무 및 행정지원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한다.

② 협업기관의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, 연구활동비로 구분하며, 각 비목별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1. 인건비: 협업기관의 내부·외부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2. 연구활동비: 사업수행과 관련된 출장비 및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등

③ 협업기관의 정산 수수료는 정부지원금에서 계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업비 집행) ① 협업기관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 및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한다.

③ 사업비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

④ 협업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집행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계정산) ① 협업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.

② 주관기업의 현금출자금은 재원관리기관의 수납 및 교부 내역, 협력기업의 사업비 정산을 통해 검증된 것으로 본다.

② 정산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집행 잔액
2.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
3. 지정회계기관이 불인정한 금액

제5장 보칙

제14조(정산 사후조치)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정산 완료 후에도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재정산 및 반납 조치를 취할 수 있다.